

# 여야 '상생연대 3법' 격돌... 현안 법안 뒷전

여야가 이른바 '상생연대 3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격돌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광주·전남 주요 법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지역 현안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 이은 임시국회에서 표류 끝에 처리가 무산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경쟁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의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본격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위원회에서 '상생연대3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역·민생·경제 입

### 민주 103개 처리 법안 미포함...국민의힘 반대 여전

### 표문화전당 혼돈 지속·한전공대 개교 차질 우려



법과제 103건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법 추진이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제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선택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연대 3법안을 놓고 2월 정기국회 대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민의 한숨이 늘고 있다.

지역 현안 법안들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아특법은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이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혼돈이 빠져있다.

한전공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 중이다. 민주당조차도 103개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오는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군공항 특별법과 여순특별법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진척이 없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해 12월 여야간 경쟁국면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 등이 지연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한전공대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 정 총리 "文대통령에 부동산 공급 대폭 확대로 전환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원래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개최

### "거리두기 '하향 논의' 재검토"

### "손실보상, 시기 못박기 어려워"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 때문에,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재보선 전 지급' 논란이 일었던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딱 못박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

등에서 직언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그런벨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정쟁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가 있어서 안되고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도 안된다"고 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 대해서 "이분들이 갈등하는 것보다 검찰개혁에 힘을 합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했다"며 "그게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을 두고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치 경력에 비해 대중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두고는 "제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 반면에 자기 정치를 하는 데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결과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소병철,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김기현 "꺾대기뿐인 인사청문회

### 文대통령, 차라리 폐지하시라"

### "후보자 무자격 사실 두려운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여당의 주특기인 일방 날치기 처리 솜씨를 발휘해 인사청문회를 폐지해 버리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습고 귀찮은 절차에 불과한건가, 아니면 후보자의 무자격 사실이 들릴까 두려운건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이자 하자투성이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당 만의 찬성으로 또 날치기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하명에 따른 27번째 반쪽짜리 장관급 인사"라며 "이쯤 되면 꺾대기뿐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에 의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까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5일 열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나 마나한 맹탕 청문회가 될 조짐"이라며 "장남 군대 면제, 다단계약사 작성 및 탈루 등 의혹을 확인하려해도 '어디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는 배정인지는 몰라도 그 흔한 매매계약서 하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여당은 비호하고,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며 오히려 부추기고 계신다"면서 "앞에서 험치하자 하시면서 뒤에서 행동은 국회무력화, 야당 권한 깎아뭇개기 반복이니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